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중심으로 -



차 례

일러두기	i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iii
교원치유지원총괄센터	v
제1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	1
I. 교육활동 침해 행위	3
II. 교육활동의 사법적 보호 수단	32
제2부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37
III.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39
제3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제도	51
IV.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3
V. 시·도교권보호위원회	61
VI.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62
제4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65
VII.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67
VIII.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	72
부 록	75
I.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77
II. 관리자 및 동료 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 대응 방안	97
III.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안)	103
IV. 각종서식	110

일러두기

본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 교원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며 또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부 교육활동의 법률적 이해’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 공무방해, 업무방해의 개념과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용어들은 형법 및 형법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되고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념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위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부득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대법원 판례를 게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다른 일반 사안과 달리 특수한 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존의 판례와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과 ‘제3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제도’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교원치유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학교업무담당자, 상담사, 변호사 등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대응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원 보호 내용과 가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방법 등을 기술하였으며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들의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 및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절차를 안내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역할과 사업 내용을 제시하여 업무담당자들의 실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는 학교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원) 모두가 배움의 터전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구성원 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가정통신문이나 리플렛의 형태로 제작되어 보급된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되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원들이 행복한 학교, 그래서 교원들의 긍정적 에너지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학교 본연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 매뉴얼은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대립하는 현재의 구도에서 행복한 교원과 꿈꾸는 학생들, 그리고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보호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구도로 바뀌어 가는 데 기여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주요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정 이유

-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
- 기존의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제명 변경(2016년 2월)

■ 주요 내용

- 교원의 지위 향상,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서 교원의 권위 존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무 규정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우대, 교원의 불체포특권 및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 학교안전사고 책임에서 교원을 보호하여 직무수행의 안정성 도모
- 징계 및 인사 상 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규정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등 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기존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법제명 변경(2016년 8월)

■ 주요 내용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관·조직 운영, 연수 및 홍보, 피해 교원의 치료 및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에 대한 행사 참여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제한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리

» 교권보호위원회

■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의 2(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주요 내용

-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역할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자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 권고 등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사건 처리 업무 주관
-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 심의, 단위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못한 사건의 조사 및 분쟁 조정, 피해 교원 치유 및 복귀 지원 등의 업무 담당
- 학교 및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와 지역인사를 포함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교원치유지원센터

■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 주요 내용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비용 지원 가능
-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 구축, 전문인력 및 상담실 확보 등) 명시

교원치유지원총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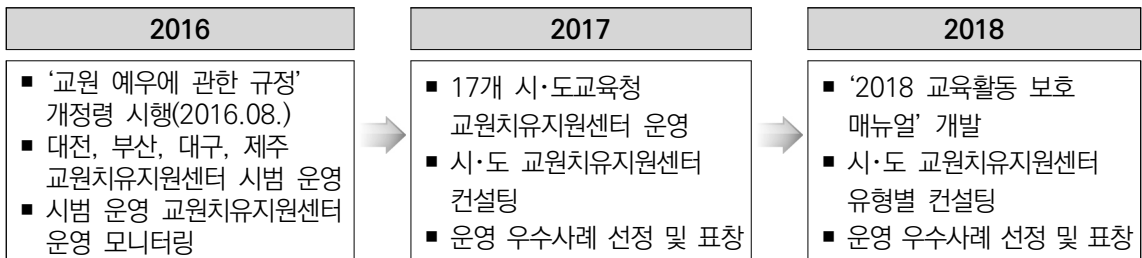
1 설립배경 및 주요 업무

교원치유지원총괄센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교원치유지원총괄센터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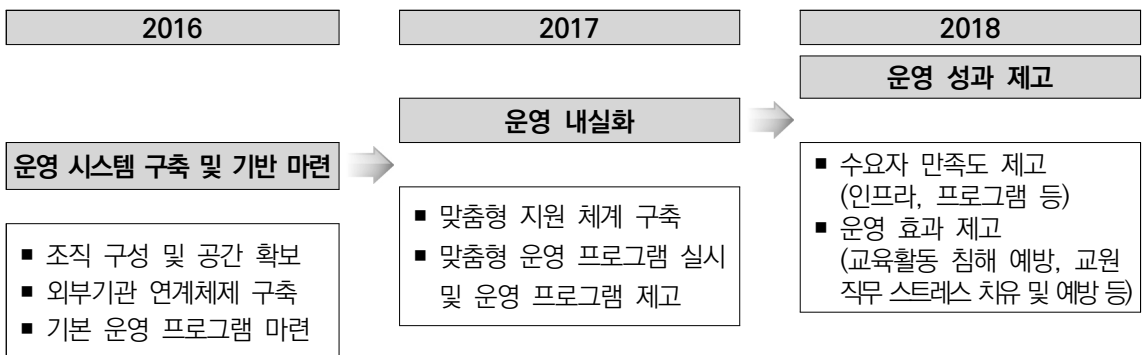
-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컨설팅 수행, 운영 성과분석, 각종 교육·홍보자료 제작
-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수행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자료 개발

2 운영 경과 및 주요성과

» 운영 경과



»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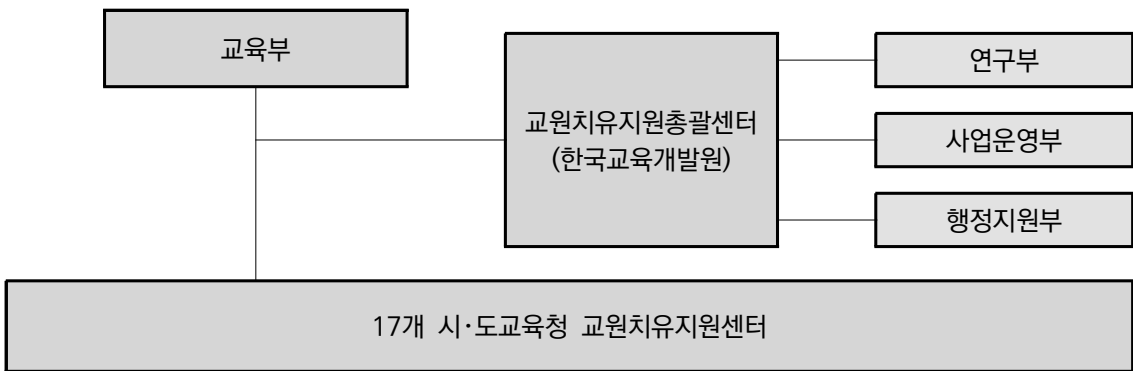
3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의 목적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 향상
-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존중 분위기 조성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치유활동 강화
-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4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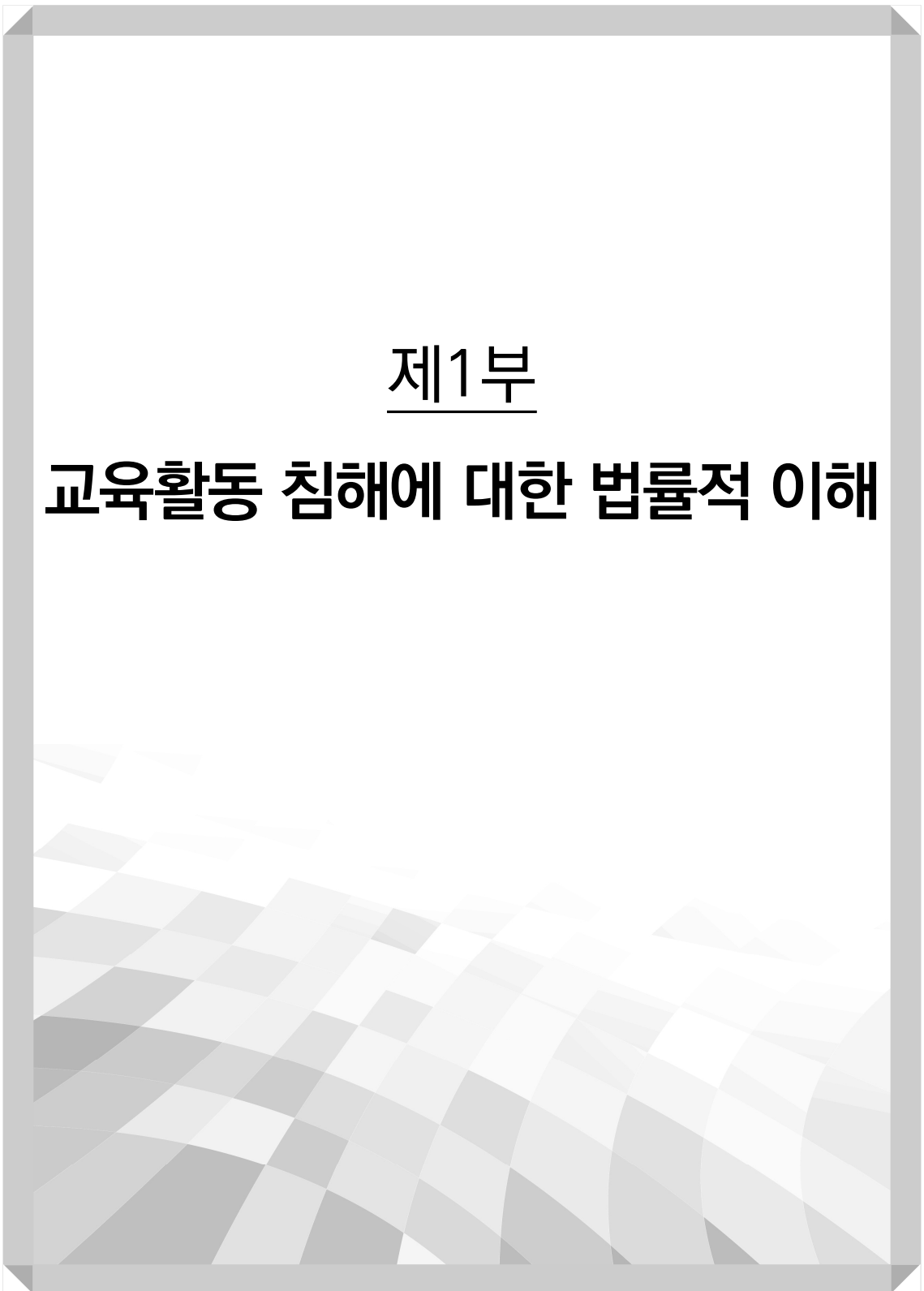


기관별 교원치유지원 사업 운영 체계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사업예산 확보 및 행정지원 ■ 사업관리 및 감독
한국교육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치유지원 사업 운영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컨설팅 - 교원치유지원 사업 관련 현안 정책 연구 - 교원치유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교원치유지원 사업 관련 각종 자료 개발 - 교원치유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등 - 교원치유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시·도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다양한 홍보 제공

제1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



I 교육활동 침해 행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¹⁾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도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②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③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④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 학교의 학생,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동료교원 등

- ④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교육활동’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2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

가. 상해와 폭행

1) 상해

① 개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의 이해

유형력: 일반적으로 구타, 밀치는 행위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 손으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 야구 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골절상을 입힌 경우
- 공포 또는 경악케 하여 정신장애나 온전한 신체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 오랜 시간 협박하여 실신(기절)하게 하는 경우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케 한 경우

③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²⁾에 처한다.

④ 대법원 판례

-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우측 머리가 다소 부었고 우측 발목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2) 형법 제41조에는 형의 종류를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의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범죄에 대한 형벌로 벌금, 과료, 몰수를 재산형이라고 한다. 형법 제45조에는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형법 제47조에는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상해라고 한다. (대판 2001도5925)

-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이 훼손되거나 장애가 초래된다면 상해에 해당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대판 98도3732)

⑤ Q&A

Q.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해인가요?

A. 상처의 정도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경우는 비록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라 볼 수 없습니다. (대판 99도3910)

Q. 팔에 동전만한 크기의 멍을 들게 하여 1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는 상해에 해당하나요?

A.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판 96도2673)

2) 폭행

① 개념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
- 멍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경우
-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두르는 경우
-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 사람의 신체를 때리려고 하는 경우

③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특징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⑤ 대법원 판례

-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판 89도1406; 대판 2000도5716)
- 듣는 사람의 청각기관에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고음을 내거나 큰 소리의 음향을 이용하여 자극한 경우라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폭행에 해당한다. (대판 2000도5716)

⑥ Q&A

Q. 반드시 사람의 신체와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폭행이 성립되나요?

A. 반드시 신체에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폭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폭행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한 경우에도 폭행은 성립됩니다.

나. 협박

1)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경우
- 외압을 이용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경우
- 당신의 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퇴근길에 해하겠다는 경우

3)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특징

- 반의사불벌죄이다.

5) 대법원 판례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대판 2006도1125)
-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³⁾ (대판 74도2727)

6) Q&A

Q.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나요?

A.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판 2011도2412)

- 3)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서 그 집 마당까지 가서 그곳에서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협박죄를 인정하였다. (대판 74도2727)

Q. 해악의 고지와 관련된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제시할 수 있나요?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판 2006도1125)

Q.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하거나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사이, 동거했던 남성에 대해 말다툼을 높이면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하거나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의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대판 86도1140; 대판 2006도546)

따라서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판 90도2102; 대판 2005도329)

Q. 상대방이 교사를 협박하긴 하였으나 그 내용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 정도라면 협박이 성립되나요?

A.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판 98도70)

Q. 교사를 협박하기 위하여 실제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없음에도 가위, 송곳 등을 휘두르면서 ‘불을 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협박이 성립되나요?

A. 실제 행동으로 옮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행위자의 행동이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됩니다. (대판 90도2102)

다. 명예훼손 및 모욕

1) 명예훼손

① 개념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의 이해

불특정: 행위자와 특정(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다수인: 복수보다 더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공연하: 대화자 이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어떤 학생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여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 한 명에게 특정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이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판 92도445)
-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A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전체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우리 학교 수학 교사인 그의 매형이 시험 문제를 알려줘서 전체 1등이 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③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특징

- 반의사불벌죄이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보다 가중 처벌된다.

-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유포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형법 제310조)

⑤ 대법원 판례

-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1인이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 (대판 96도1007)
-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없으면 공연성이 부인된다. (대판 94도1770)

⑥ Q&A

Q.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요?

A.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A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을 시간차를 두고 몇 사람에게 하였는데,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비방하는 말이 퍼졌고, A후보자도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A의 말을 들은 사람은 A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방한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충족되어 결국 비방자는 처벌받았습니다. (대판 96도1007)

Q.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사례도 있나요?

A. A는 자기 집에서 B와 서로 다투다가 B에게 한 욕설을 A의 남편 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판 85도2037)

Q.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중요한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요?

A. 단순히 피해자의 집 앞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꾸눈, 병신”이라고 말한 사건에서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판 94도1770)

Q. 모욕죄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된다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것이 경멸적인 언사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판 94도1770)

2) 모욕

① 개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이 모두 포함되므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병신 같은 ○○놈’, ‘나쁜 ○’, ‘죽일 ○, 개○○’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 (대판 94도1770; 2016도9674; 2016도15264)
-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교사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대판 88도1397)
- 특정 교사에 대하여 ‘A선생은 명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⁴⁾
- 특정 교사를 ‘똥똥해서 돼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⁵⁾와 같이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③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다. (대판 2003도4934) 왜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형법의 모욕죄를 적용한다.

5)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똥똥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 모욕죄로 고소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간부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법 2006고정1777)

④ 특징

-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된다.
- 모욕죄는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⑤ 대법원 판례

-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를 하면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대판 2003도4934; 2003도3972)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 (대판 2015도2229)

⑥ Q&A

Q.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A.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 지불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A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세요”라는 권유반자 경찰관들과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A경찰관에게 “뭐야. 개○○야.”, “뭐 하는 거야. ○○들아.”, “○○놈들아. 개○○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피고인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대판 2016도15264; 대판 2016도 9674)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⁶⁾도 있었습니다.

6) 2017년 B씨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앞 주차장에서 A씨와 연쟁을 벌였다. A씨가 무단 주차 후 사과도 없이 가려 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말다툼 끝에 B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미친 ○”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A씨가 B씨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B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해 모욕했고 원고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사건의 발생 경위, 모욕의 정도와 횟수, 피고의 벌금 액수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1120)

Q. 경미한 모욕도 처벌하나요?

A. 문제된 표현을 전체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참조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하게 된 경우,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발언한 장소, 발언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경미한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판 2015도2229)

Q. 모욕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가 관리소장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리소장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는 말을 하여 사건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와 관리소장과의 관계, A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관리소장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판 2015도2229)

Q. 교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A. 전화 통화 중 욕설은 일대일 대화 중이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욕설이나 폭언 등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A.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동의 없이(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한 합법적인 녹음이라고 할 것이므로,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심각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녹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판 2013도16404; 2006도4981) 같은 맥락에서 대화당사자인 상대방이 교사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녹음이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민원인이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합법적인 녹음에 해당)

라. 손괴

1) 개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의 이해

손괴: 유형력을 행사하여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은닉: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건 자체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괴와 구별됨)

기타의 방법: 손괴,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불만의 표현으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학교에 걸어 놓은 그림에 학생이 낙서를 하여 그 그림을 걸어들 수 없게 하는 경우
- 학교에 게시 중인 문서를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경우(대판 2014도13083)

3) 관련 법조항

-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대법원 판례

- 적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복도계단과 건물 외벽 등 200여 군데에 낙서를 한 경우,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등을 보았을 때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라고 하였다. (대판 90도602)

- 30개 정도의 계란을 건물의 유리문이나 유리창에 투척한 행위는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물 손괴죄를 부정하였다. (대판 2007도2590)

5) Q&A

Q. 학교에서 재물손괴죄로 문제된 사건이 있나요?

A.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지도하고 훈계하는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교장의 먹살을 잡고 30분 동안 욕설을 퍼부었으며 탁자에 있는 서류들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TV를 파손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Q. 위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교장의 먹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교장실에 대형 TV를 손상시킨 것은 TV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서류를 집어던지고, 폭행과 같은 위력을 사용하여 30분 동안 벌인 난동은 교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참고

국·공립학교의 공용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를 적용할 수 있지만,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검사가 어떤 조항을 적시하여 기소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항이 달라진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1) 개념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하여(포옹이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대판 2001도2417)
-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대판 2007도10050)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사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하는 경우 (대판 2014도6309; 대판 2013도8619)
- 학생이 수업 중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공연음란)
- 학생이 교사의 나체를 그림으로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음화제조·반포)
- 학생이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3) 관련 법조항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대법원 판례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음란물이 게시된 인터넷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경우도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된다. (대판 2016도213897)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처벌되는 것이므로, 촬영대상자(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하는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9도7973)
-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7) 음란물 동영상 링크를 보낸 경우에는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해 동영상을 재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음란물 동영상 자체를 클릭해 시청하는 것과 접속 링크를 클릭해 시청하는 것 자체에 큰 차이가 없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306)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된다. (대판 2008도7007)

5) Q&A

Q. 음란하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A. 판례 등에 따르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판 98도679)

Q. 학교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음란한 행위’라고 합니다. 학생이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대판 2000도4372) 따라서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생을 따끔하게 지도하자, 학생이 교사에게 반항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시켰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표출의 의미로 다른 신체일부를 노출시키는 경우에도 공연음란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합리적인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⁸⁾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판 2003도 6514)

Q.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추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판 2001도2417)

8)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

9)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추행의 목적이 반드시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이 성립되나요?

A.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반항의 의미로 신체를 추행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판 2013도5856)

바. 불법정보 유통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① 개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우리 담임교사는 동성애자야, 매일 남학생들의 손을 잡고 다녀 …”라고 인터넷사이트 ○○월드에 올린 경우(대판 2007도5077)

③ 관련 법조항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량 비교〉

법률 \ 죄명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 법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특징

- 반의사불벌죄이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보다 가중 처벌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대법원 판례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댓글을 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대판 2008도2422)
-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한다. (대판 2012도10392) 왜냐하면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⁰⁾

10)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⑥ Q&A

Q.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례는 있나요?

A. 초등학생인 A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실력이 있는데도 학교의 경연대회에서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학부모들과 상담 중 금품을 요구한다는 거짓의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는 ○○○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있습니다.

Q. 위의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A. 대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글을 읽는 사람들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판 2013도3517; 2008도8812; 2005도5068)

그런데 이 사건에서 A학생의 어머니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담임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비방의 목적을 갖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허위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도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A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① 개념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구체적 협박이 아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전화, 이메일 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리나 문자 또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③ 관련 법조항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④ 대법원 판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¹¹⁾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대판 2009도39)
-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이 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판 2008도4351)

⑤ Q&A

Q.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불안감 조성행위로 처벌 받은 사건이 있나요?

A. 17개월 동안 자신과 이혼한 사람에게 33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너는 진짜 인간쓰레기다. 너 같은 인간은 청소기로 확 쓸어버려야 한다. 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아”, “너 진짜 죽을래 왜 내 전화 안 받고 무시해 빨랑 전화 받아 전화 안 받으면 너 진짜로 죽을 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판 2009도39)

Q. 위의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메시지의 내용이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욕설을 해대며 또는 전화를 받으라고 압박지르는 것으로서 거의 동일하며, 매달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씩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등을 특별한 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적으로 발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11) 대구지법의 항소심 사건에서는 3개월 동안 7차례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대구지법 2009노1230) 하루 동안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3번 보낸 사람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다. (대구지법 2007노146)

Q.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불안감 조성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나요?

A.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전화 받아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라는 내용으로,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 거니까요”, “니 ○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으로, “개○○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판 2008도4351)

Q. 위의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2회의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¹²⁾

1)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의 경우)

① 개념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의 이해

위계: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교육부장관의 고시 제2조 제1항(‘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서 언급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314조(업무방해)는 형법의 범죄행위를 지칭한 것이다. 앞에서 다룬(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른 범죄행위와 달리 교육부장관의 고시로 두 개의 조항(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각각 서술하였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학생을 찾겠다고, 1시간 동안 교사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가 교실 문을 안에서 잠그자,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③ 관련 법조항

-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특징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은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음)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⑤ 대법원 판례

경찰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대판 2013도11050)

⑥ Q&A

Q.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사례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공립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두고 있는 A(남편이 세력가)는, 학생지도를 법령에 따라 철저히 하는 담임교사를 찾아가 “이 사람아 사람이 그렇게 고지식해서 되겠어 … 앞길이 창창한 내 딸을 망치려고 해”라고 하면서 책상을 내리쳤다. 그러면서 “… 만약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려는 내 딸 ○○에 대해 무단결석 처리하면 내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여 담임교사가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Q.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A가 담임교사에게 한 이야기가 적어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였다고 판단되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가 한 이야기는 결국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교사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사립학교의 경우)

① 개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의 이해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문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A교사가 수업중인 교실로 쳐들어와 “낙하산으로 들어온 너(교사)는 수업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말하며 교사를 밀친 경우

③ 관련 법조항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특징

-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82도2584)
- 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방해한 때 적용할 수 있다.
- 위력(폭행)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폭행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된다. (대판 2007도7140)

⑤ 대법원 판례

-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판 98도3767)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 (대판 2003도7927)

⑥ Q&A

Q.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A. 사립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어머니 A는 딸이 수업 받고 있는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임교사에게 “내 딸에게 어떻게 했어, 내 딸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지”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병신 같은 ○, 양아치 같은 ○”이라고 욕설하며 뜨거운 커피를 던진 후 주먹과 발로 머리를 가격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습니다.

Q. 위의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어머니 A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직접 폭행을 하여, 교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생리적 완전성을 해한 것은 상해에도 해당합니다. (폭행치상) 뿐만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 욕설을 한 것은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인지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의 어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처분도 받았습니다.

나.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1)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① 개념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용어의 이해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이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판 2007두22498)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의 경우
- 육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는 행위
- 언어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 수업 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 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며 말하는 행위
 - 언어적으로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쉬는 시간 복도에서 지나가는 교사에게 큰소리로 ‘섹시한데!’라고 하면서 휘파람을 분 경우
 - 수업시간에 성매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이후 교사가 설명하는 중 학생이 교사에게 “경험담?”이라고 한 경우
- 시각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 칠판이나 종이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③ Q&A

Q. 동성 간에도 불쾌감을 느꼈다면 해당되나요?

A. 네. 성적 언동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는 동성 간의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Q. 불쾌한 성적 언동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즉시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동료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심각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성폭행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가해자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 및 기분을 6하 원칙을 갖추어 메모 또는 기록을 확보)

Q.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하여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A.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이나 주변인들을 통해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상대방의 성희롱은 성립됩니다.

Q.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

A.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 하여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A.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성희롱의 의도로 한 언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의 언동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성적 언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수단이 있나요?

A. 성희롱 등 성적 언동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 및 기록을 문서화시켜 학교에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①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함

참고

-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일회적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부당한 간섭이므로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로 인한 감정적 충돌 등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의사소통 과정의 일부분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③ Q&A

Q. 학부모가 학생과 교사 간에 있었던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항의성 발언을 하는 것도 부당한 간섭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되지 않나요?

A. 학부모(보호자)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 제2항에도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학부모의 이의 제기 및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조건 교육활동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동 등 별도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초과한 부분으로 별건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을 위한 각종 치유 및 지원프로그램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① 개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이 교원지위법시행령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권존중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교원지위법시행령과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③ 관련 법조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II 교육활동의 사법적 보호 수단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은 학교 내의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이와는 별도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서 학교 내 각종 절차와는 별도로 교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사법제도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기록 및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사법 구제 수단의 활용 시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더라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지만, 교원의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전담 변호사 또는 시·도교육청의 위촉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형사소송(형사 고소 및 고발)

-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 처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¹³⁾
- 모욕죄 등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만 고소가 가능함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유효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청구 시 유의사항
 -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의사를 밝힘
 -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목격자 진술서, 녹취 등의 기록을 확보해두어 증거로 활용할 때 구제 확률이 높아짐

13) 참고적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그 침해가 위법하고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

■ 사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와 수업 중인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후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목격한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의 사실 확인서를 확보한 후 피해 교사가 학부모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학부모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음

2

민사소송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시 유의 사항

- 소장(가해자(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 되어야 함)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반드시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알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불법행위와 교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구제 확률이 높아짐

■ 사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교시 수업 시간에 심하게 떠들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교무실로 잠시 내려가 있어라"라고 하자 학생이 의자로 교사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쳐 교사의 왼쪽 어깨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됨. 이에 교사가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받은 사례가 있음

3

학교장 통고제¹⁴⁾

교육활동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됨. 이러한 경우 통고제도를 활용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학생을 선도하는 방법으로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음

14)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안내는 각 지역 가정법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음. 법원행정처(2018) “소년 통고 실무(개정판)” 참조

■ 방법

- 학교장이 가정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¹⁵⁾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함
-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임

■ 장점

-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특징

- 학생의 비행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육, 치료 및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함
- 학생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비행 초기에 선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관련 법조항

「소년법」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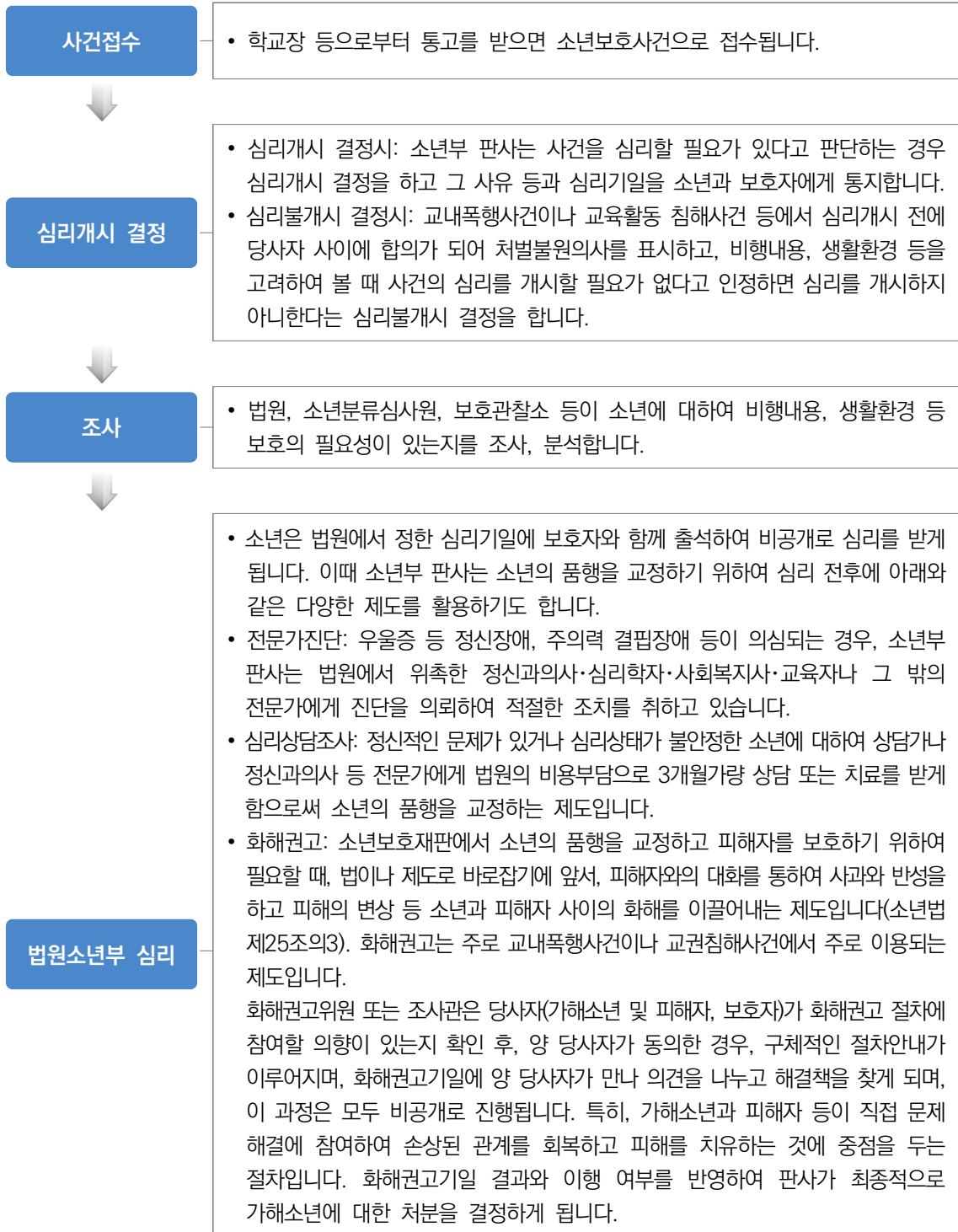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15) 통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가정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되며,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통고"로 검색하여 내려받기할 수 있음

■ 학교장 통고제 처리 흐름도





보호처분 결정

- 처분전교육명령: 사안이 경미하여 1호 보호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조사관이 소년 및 보호자를 1시간 가량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보호소년 및 보호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비행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 보호처분 결정: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통고사건 중 심리가 개시된 경우라도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서 비행초기의 소년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2부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III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1 사안 처리 방향 및 원칙

가. 사안 처리 방향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적 지원 강화
 - 학교구성원 간 인권존중 교육을 통해 예방적 지원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상담 및 법률 자문 운영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예방을 위한 연수 및 대응 매뉴얼 교육
- 사안 발생 시 적극적 교원 보호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 피해 교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¹⁶⁾
 - 즉각적인 사안처리로 2차 피해를 막고 사실 왜곡, 와전되지 않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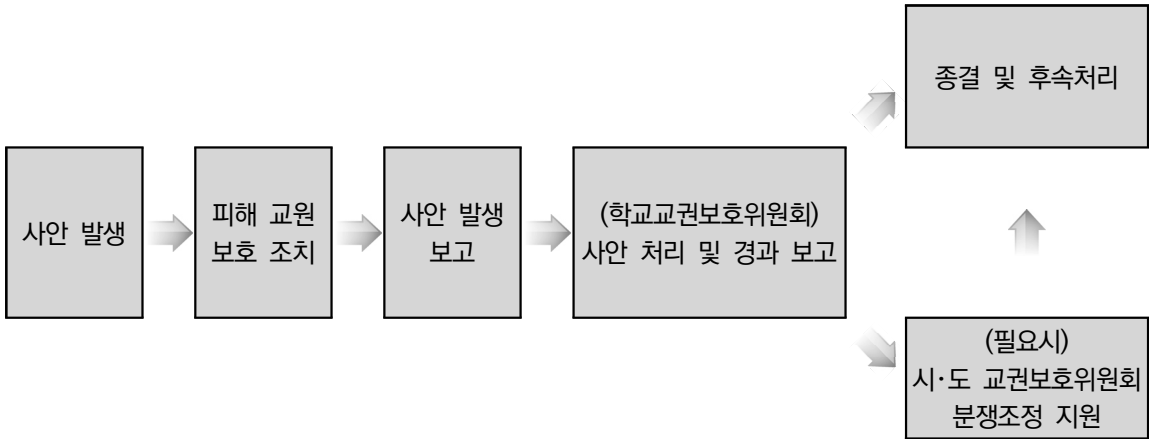
나. 무관용 원칙 적용

- 관용적인 태도 지양
-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
-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 가능(예: 공무집행방해죄)
- 상급기관 의무 보고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16) 특별휴가 5일(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2018.11.9. 시행)) 또는 공무상 병가 가능

2 사안별 대응 매뉴얼

가. 사안처리 기본 흐름도



나. 사안처리 단계별 유의 사항

- 피해 교원 보호조치
 - 사건 현장 탈피 (동료교사 및 주변교사에게 도움 요청)
 - 피해 교원은 필요시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 조치
 - 필요한 경우 피해 교원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안발생 즉시 보고
 -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
 - 증거자료, 목격자 확보
 -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가 학생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 교육청(교육감)에 즉시 보고 및 경위 파악,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사안처리 및 경과 보고
 - 학교규칙 등에 의하여 처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중재 (학생 선도, 보호자 대응,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
 -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한 학생 징계 조치 가능

-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가 학부모(보호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민·형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 가능
 - 피해 교원이 필요시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상담 제공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종결 및 후속조치
- 학교(장)-학생, 학부모-피해 교원 상호간 분쟁 발생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로 1차 분쟁 조정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치유지원 프로그램 지원
 -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 단위학교 차원의 재발 방지 방안 마련
- 시·도교육청 분쟁조정(재심 청구 시)
- 단위학교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 최종 조정에 불복 시 행정심판 등 활용 안내

다. 사안처리 세부절차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 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교장/교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및 피해 교원 보호 조치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및 관할교육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발생 시 업무 및 수업고려, 조퇴 및 병가 조치 요청 ■ 사안에 따른 즉각적인 병진료(상해 치료 및 심리상담)
조사 및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원·침해 학생: 사실확인서 작성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확인서 작성(곤란 시 업무담당 교사 등의 도움으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원 및 침해 학생·학부모(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 (서면 진술서로 대체 가능) -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심의 - 침해 학생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서면통보 - 관할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원하는 보호조치 적극요구)
선도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후 필요시 개최 가능 ■ 학생 징계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처분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의 퇴학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제기)에 할 수 있음 (단, 사립학교 퇴학조치의 경우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 위원회에 심의 결과 후 불복 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위원회 학생징계 (교권보호위원회 진술 시 서면 및 구두로 선도처분 요구 가능)
사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통보 및 이행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추수 지도 ■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활동 실시 ■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심리치료, 공무상병가, 병가, 특별휴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법적문제 발생 시 교육청 법률상담 등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보호위원회 보호조치에 따른 치료 및 병가, 공무상병가 기타 보호조치 요구 ■ 법적문제 발생 시 교육청 법률상담 지원 요청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2)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원 및 목격자: 사안 신고 (교장/교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및 피해 교원 보호 및 안전조치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보호자 경찰신고 및 관할교육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발생 시 업무 및 수업고려, 조퇴 및 병가 조치 요청 ■ 사안에 따른 즉각적인 진료 지원(상해 치료 및 심리상담)
조사 및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관할교육청에 사안 보고 ■ 시·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의 법률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확인서 작성 (곤란 시 업무담당 교사 등의 도움으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원 및 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 (서면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조치 권고 -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상담 및 치료, 수업고려, 심리적 회복 지원 조치 - 침해보호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서면통보 - 관할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원하는 보호조치 적극요구)
법적 조치 및 사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절차에 대한 교육청 법률지원 요청 ■ 분쟁 발생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신청 ■ 해결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심리치료, 공무상병가, 병가, 특별휴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피해 교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 제기 가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보호위원회 보호조치에 따른 치료 및 병가, 공무상병가 기타 보호조치 요구 ■ 법적문제 발생 시 교육청 법률상담 요청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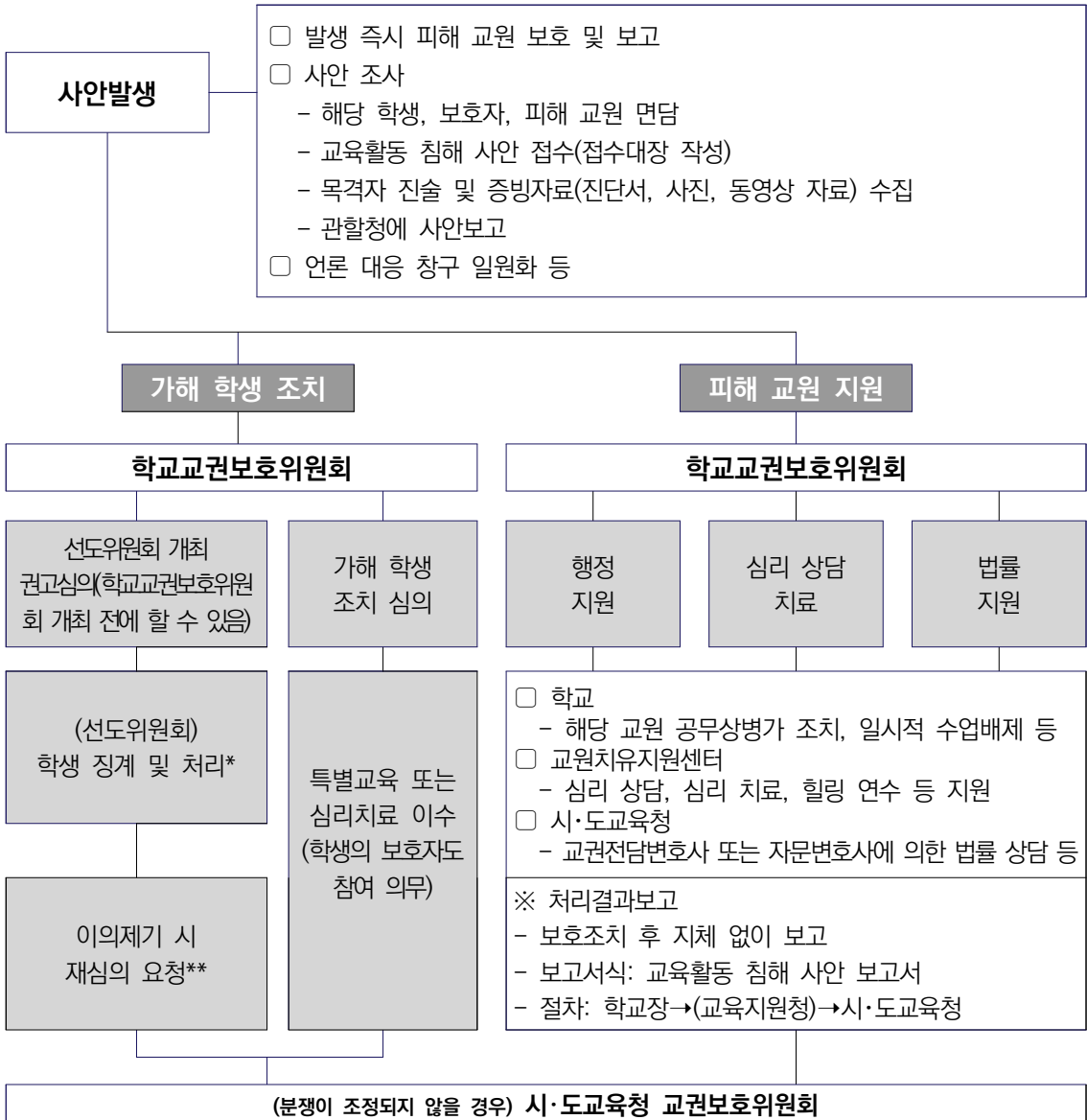
3) 관리자 및 동료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피해 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 (교장/교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및 피해 교원 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기록 ■ 접수기록
조사 및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보호업무 담당자: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여부 결정 필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경우 고충심사, 소청심사 또는 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처리 ■ 필요시 시·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의 법률상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경위서 ■ 증빙자료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 수집)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교원 및 가해자의 진술 기회 부여 (서면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조치 등 권고 -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상담 및 치료, 피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한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원하는 보호조치 적극요구)
사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통보 및 이행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해결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심리치료, 공무상병가, 특별휴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피해 교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 제기 가능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문제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또는 법률지원단 법률상담 지원 요청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라. 사안별 관련자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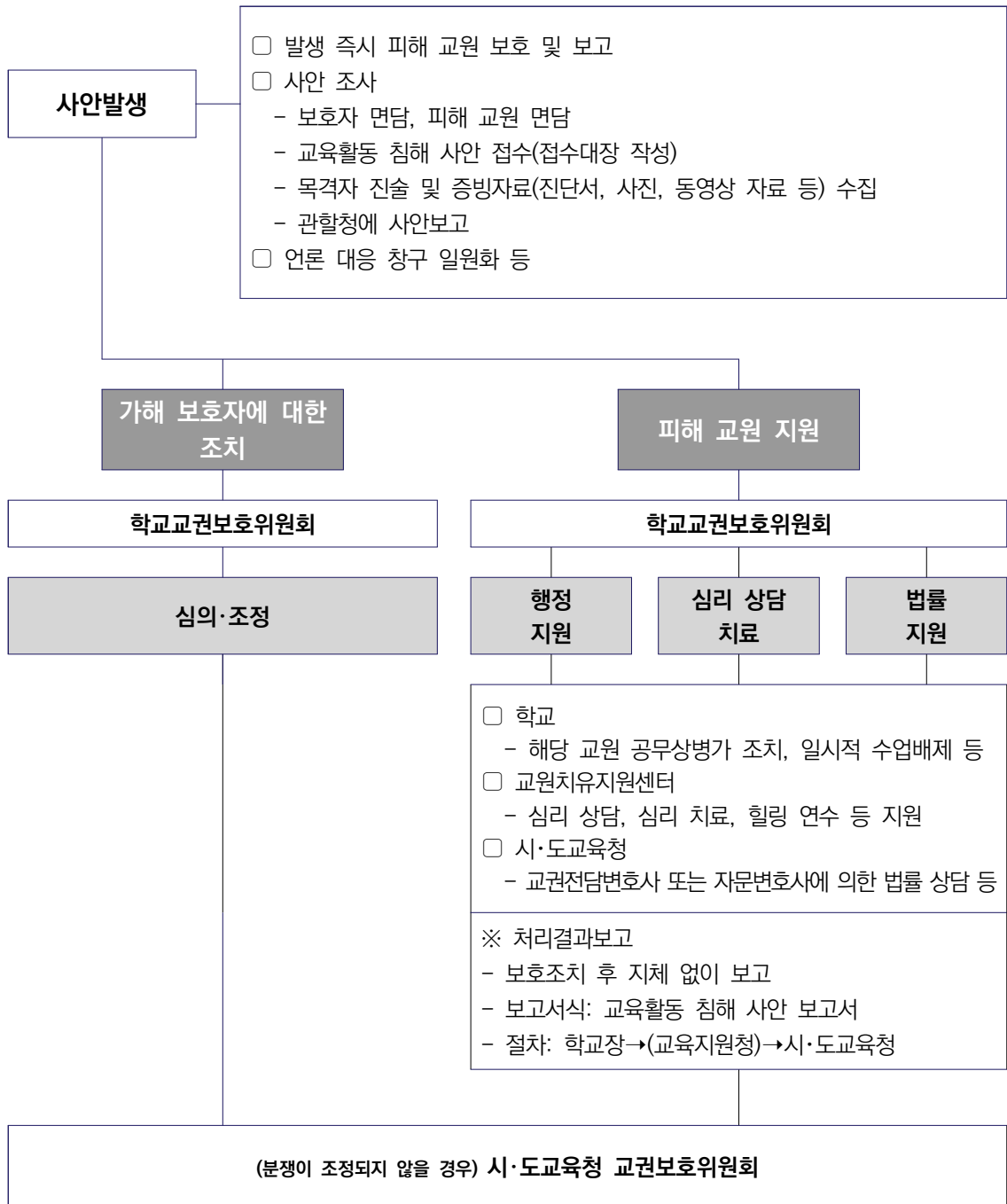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 학생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1호), 사회봉사(2호), 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처분)에 의함. 참고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근거(학생 징계 조치 및 학교장의 학급 교체, 전학 조치 가능 근거 산설)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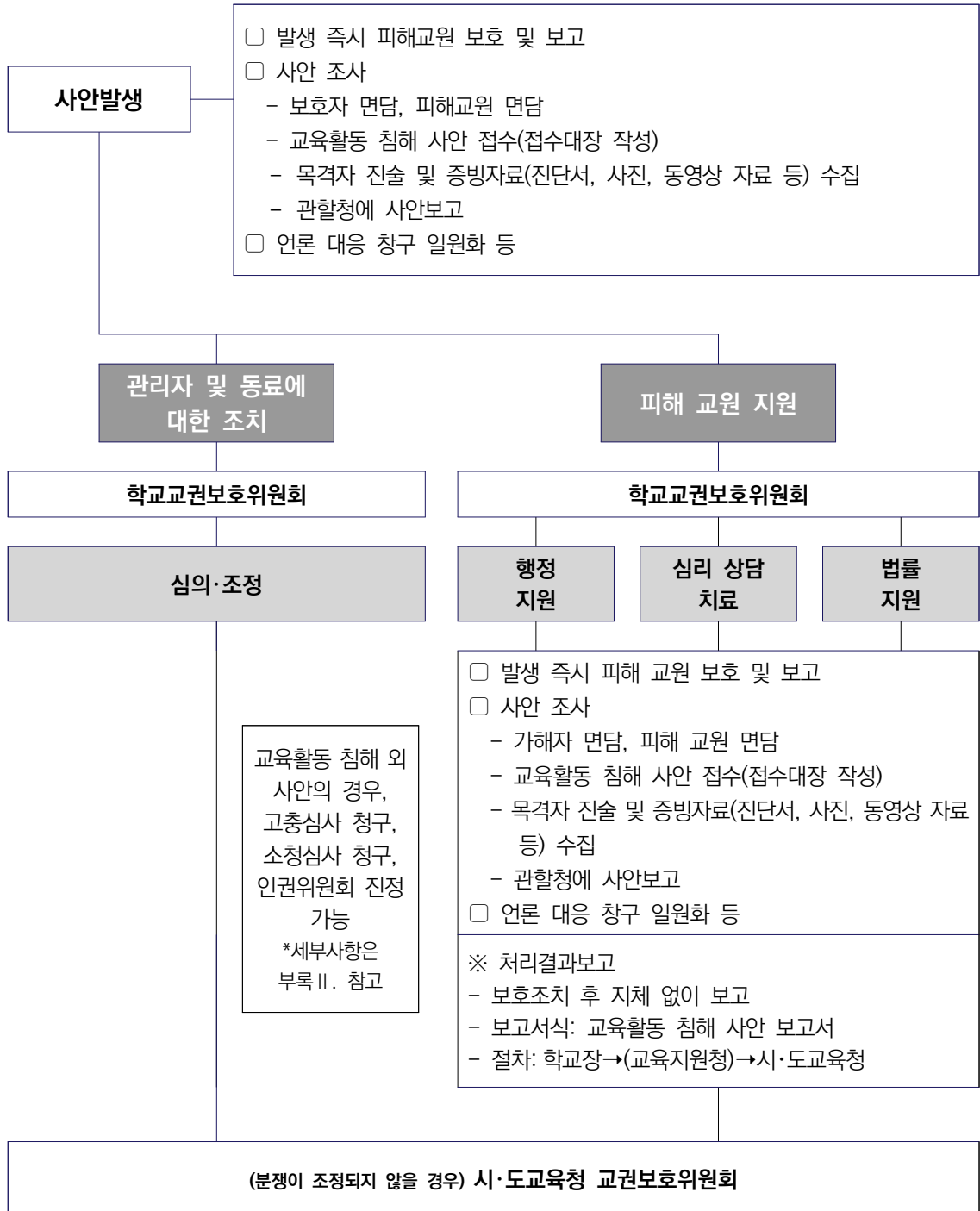
** 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의 퇴학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제기)에 할 수 있음

2)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 피해 교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제기 가능

3) 관리자 및 동료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 고충심사청구 등 청구 없이 행정소송, 민·형사상 소송 등 제기 가능

마. 대응시 점검 사항(체크리스트 예시)

	점검사항	표시 (O, X)
1	관련자를 분리하였나?	
2	학교장 또는 학교교권보호업무담당자에게 알렸나?	
3	교육활동 침해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렸나?(학생사안만 해당)	
4	발생한 사안을 학교교칙에 의해 판단하였나?	
5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및 목격한 학생을 파악하였나?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통보하였나?	
7	교육지원청(초, 중학교), 시·도교육청(고등학교) 관련 부서에 보고하였나?	
8	교사의 2차 피해 방지 및 사후 조치를 결정하였나?	
9	다른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조치를 내렸나?	
10	선도위원회 개최가 필요한가?	
11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단위의 대책을 수립하였나?	

※ 학교 상황 및 사안을 고려하여 위 점검사항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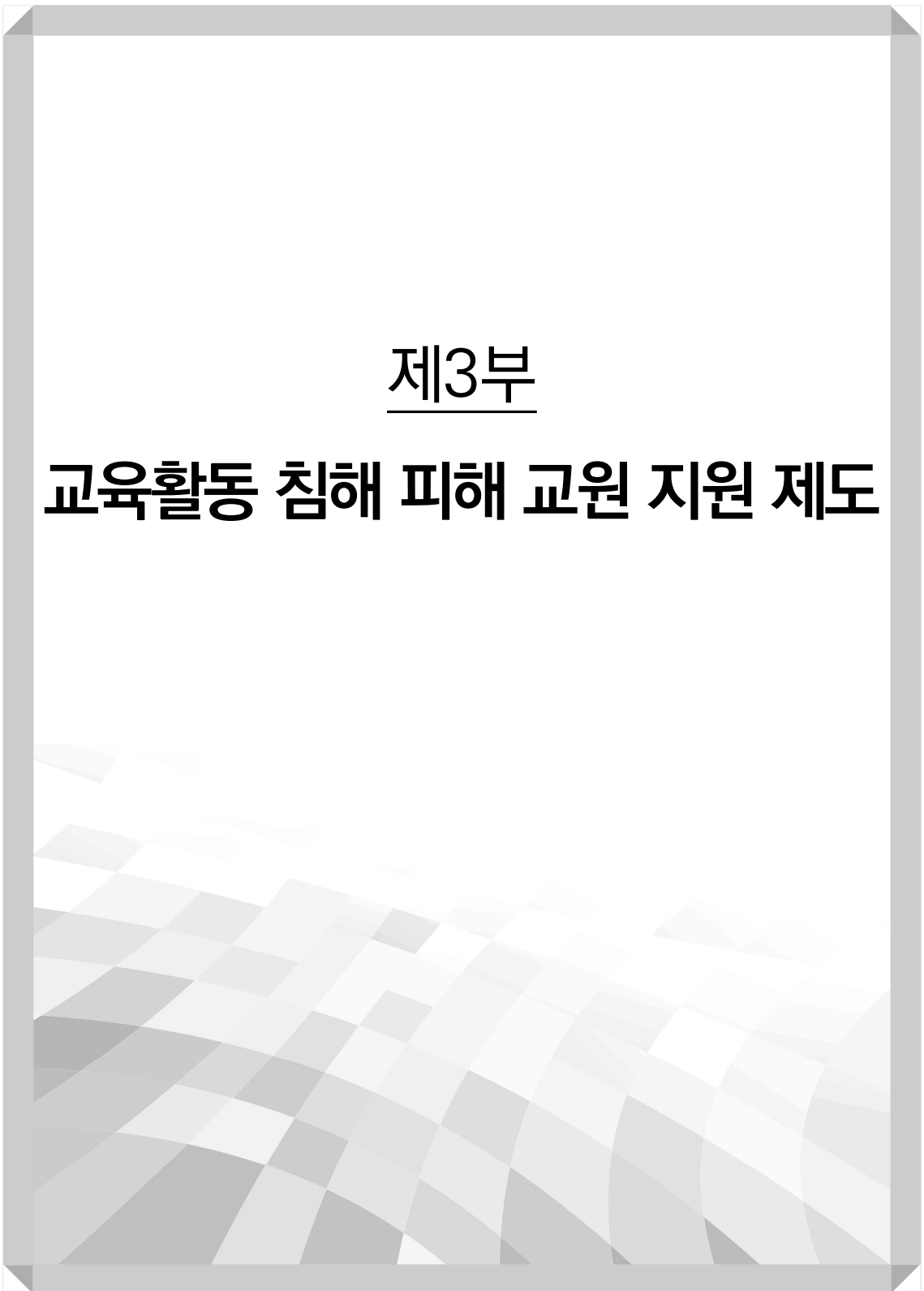
3

교육활동 침해 해결을 위한 담당자 대응 방법

담당자	기본 대응 방법
관리자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또는 보고받았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학교 대응팀 구성 및 업무 담당자 창구 단일화
	• 긴급 상황 시 112 등에 신속히 신고
	•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상담 및 안전 조치(공무상병가, 특별휴가 등)
	•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안내
	• 관할청 보고 및 필요시 고발 조치
	• 가해자와 피해 교원 양측 면담(가해자가 학생 이외인 경우)
학교교권보호업무 담당자	• 동기, 내용, 시기, 관련자 등 조사
	• 피해 교원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
	• 사안 조사 내용 바탕으로 6하 원칙에 따른 상세 보고
	• 사고 경위 파악 및 경위서 작성
	• 가해자와 피해 교원 양측 면담(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 교원	• 즉시 상황에서 벗어나 동료 교원들에게 도움 요청
	• 동기, 내용, 시기를 상세히 기록
	• 목격자 진술 확보 및 폭행의 경우 진단서 확보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관리자 또는 학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교원치유지원센터 법률 자문 요청 가능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요청 가능

제3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제도



IV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 역할 이해

■ 구성 목적

- 학교 자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대책 수립
-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 및 사건 조사
- 가해 학생·보호자 및 피해 교원 면담 등 분쟁의 조정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권고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권고를 통한 학생선도위원회의 징계 법령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¹⁷⁾

17) 참고적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6. 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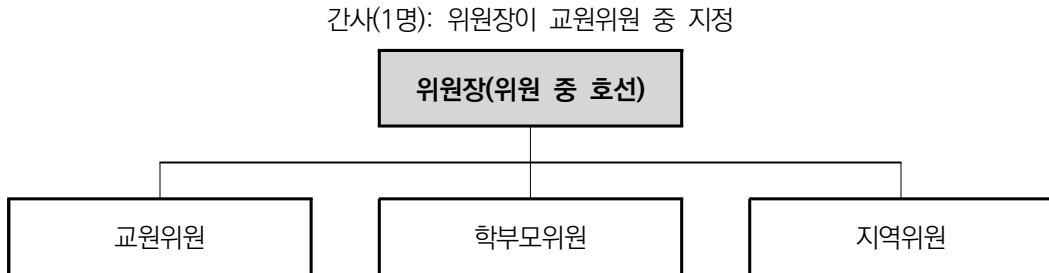
7. 퇴학처분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성 및 회의운영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방법

- (간사) 위원장이 교원위원 중 지정
-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 선출) 학교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만, 교원·학부모·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유의)



나. 회의 운영

- 소집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의준비
 -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사안조사서, 관련자 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 등)
 - 대기 장소 준비(피해, 가해 측 대기 장소를 분리해서 준비)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절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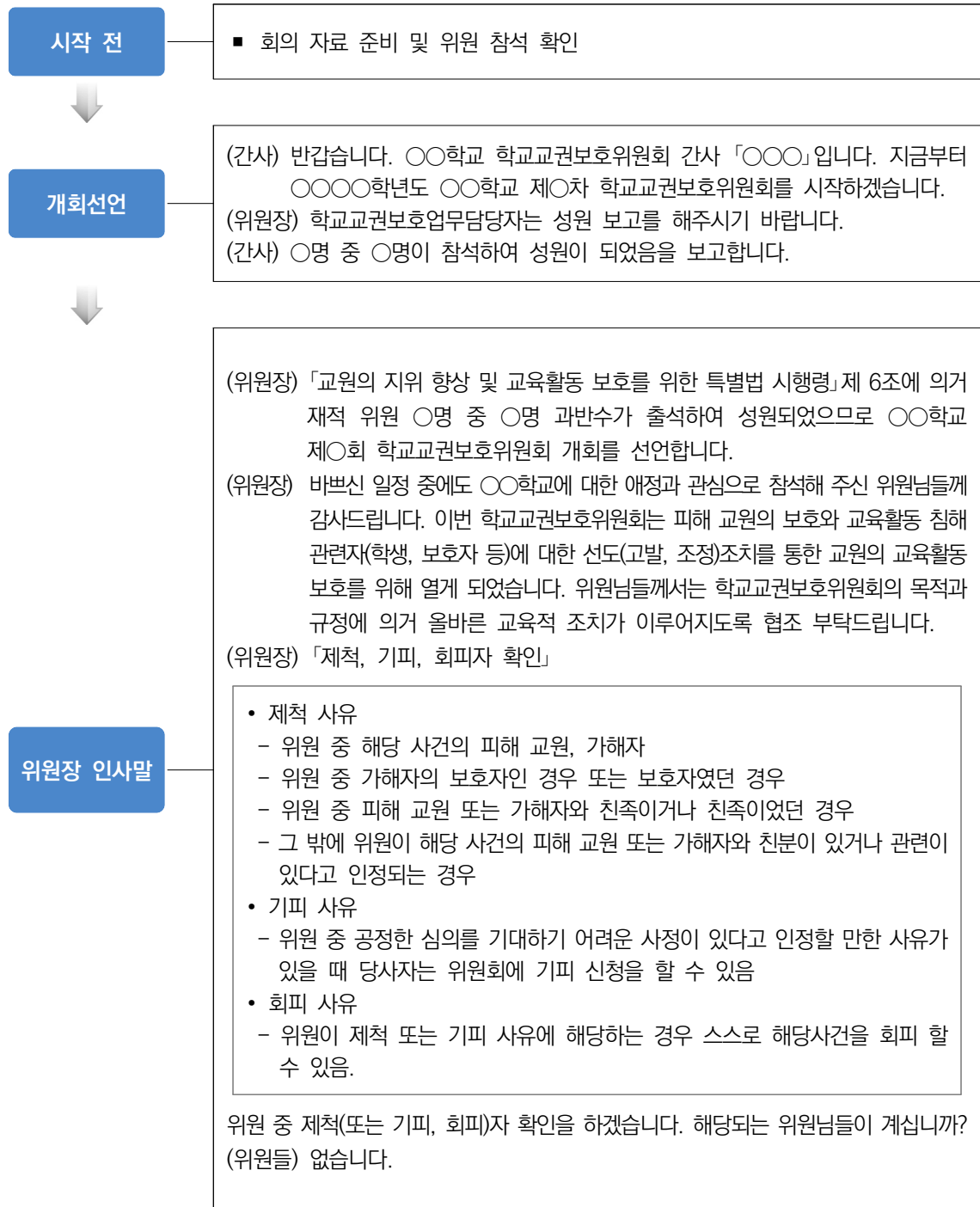
- ① 개회선언 및 인사말
- ② 제척·기피·회피 확인
- ③ 분쟁조정 목적과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 ④ 학교교권보호업무담당자의 사건조사 보고 및 질의 답변
- ⑤ 피해 교원 입장 및 발언
(이후 피해 교원 퇴장)
- ⑥ 가해 학생 또는 가해 보호자 입장 및 발언
(이후 가해자 측 퇴장)
- ⑦ 피해 교원 조치 논의 및 결정
- ⑧ 가해 학생 또는 가해 보호자 조치 논의 및 결정
- ⑨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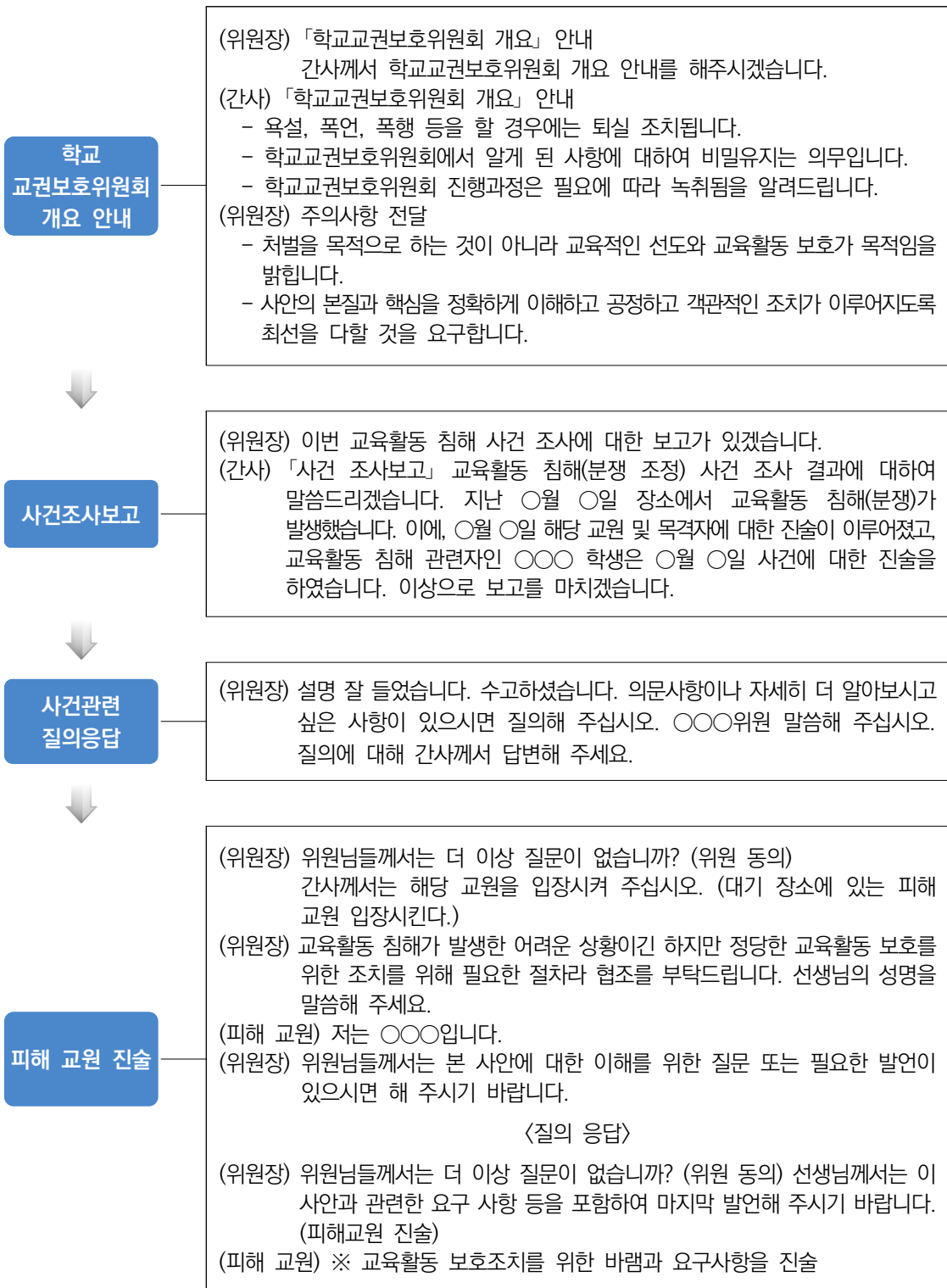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시나리오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회 전 준비 사항

- 위원회 개의 30분~1시간 전에 위원들이 참석토록 하고 위원들이 사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개요, 진행절차 등을 안내
- 관련 교원 및 침해자 간 갈등 예방 및 참고인 비밀 보장을 위해 회의 참석을 위한 대기 장소와 시간을 다르게 할 것을 권장

나. 회의 시나리오





관련자 진술

■ 관련자 입장

(위원장) 간사께서는 관련자(학생,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는 침해관련자를 입장시킨다.)

(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침해관련자) 저는 ○○○입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 또는 필요한 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마지막으로 이 사안과 관련한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해관련자) 마지막 진술

※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하여 참석 요구. 불참일 경우, 서면 등 대체하여 진술 가능. 허락되지 않은 참여자가 없도록 사전 확인 필요.

■ (위원장) 질의 답변 종료 확인 후 침해 관련자 측 퇴장

피해 교원 보호
조치결정

■ 조치 논의 및 결정

(위원장)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피해 교원 보호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1) 피해 교원(○○○)은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 상담과 특별휴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개진 및 논의 후 찬반 의사 결정)

〈결정〉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교원 ○○○에 대한 보호조치는 출석위원 ○명 중 ○명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내용(낭독): ○○○

가해자 조치
심의

■ 조치 논의 및 결정

(위원장) 지금부터는 침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1) 학생 ○○○에 대한 조치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2) 학생 ○○○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에게 서면사과하고 심리치료 조치가 이행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3)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보호자 ○○○에 대한 조치는 ○○○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개진 및 논의 후 찬반 의사 결정)

가해자 조치
결정

〈결정〉

위원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에 대한 조치는 출석위원 ○명 중 ○명 과반수 찬성으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보호자 ○○○에 대한 조치는 ○○○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학교 제○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V 시·도교권보호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차례 연임 가능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1. 해당 시·도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6의 2. 시·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 7. 그 밖에 각 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심의사항

- 교육감이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시책 자문·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 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VI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1 목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회복·복귀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및 법률 상담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예방활동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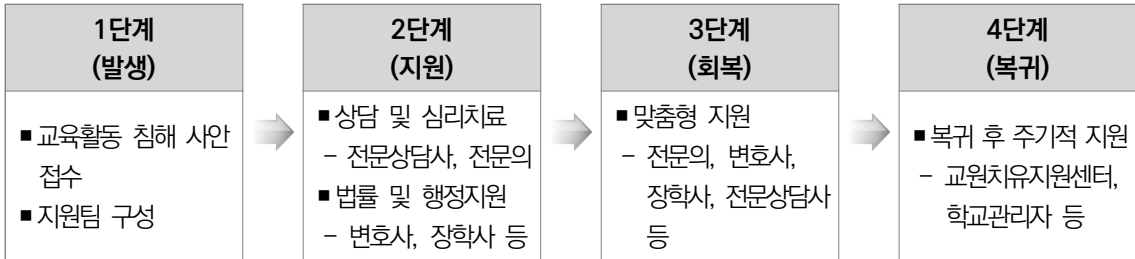
2 인력 구성 및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내부 인력	센터장/장학사	■ 교원치유지원센터 업무 총괄
	전담변호사	■ 법률상담, 예방 교육 등
	전문상담사	■ 심리상담, 예방 교육 등
외부 인력	정신과전문의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심리치료, 특강 등
	전문상담사	■ 방문형 심리상담, 예방 교육(특강) 등
	위촉변호사	■ 법률상담, 예방 교육(특강) 등

* 센터 인력 구성 및 역할은 해당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3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4

주요 운영 내용

※ 아래 운영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업 운영
학교규칙 마련,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지원, 정례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자료 배포 등
- 업무 담당자 및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단위학교 대상 전문가 특강(변호사, 상담전문가 등)
- 교원힐링연수 운영
직무연수, 힐링 동아리 운영, 자율연수 지원 등
- 교원 심리상담(치유) 지원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 심리검사, 힐링캠프 등
-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전문상담기관 연계, MOU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
-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교권전담변호사&법률지원단)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및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상담료 지원 등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복귀 지원
공무상병가, 특별휴가, 비정기 전보, 일시적 수업배제, 기타 행정지원 등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 교원배상책임보험

5

시·도별 교원치유지원센터 현황

(2019. 1. 30.기준)

구분	주 소 (위 치)	대표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093
부산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5 (부산교육연구정보원) 2.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29 (알로이시오힐링센터)	051-860-6277 051-257-0256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318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73 (인천해밀학교)	032-629-9995~8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322번길 6 (광주교육지원센터)	1644-9575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207 042-616-8202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561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522-9575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031-820-0716
강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033-258-5621 033-258-0819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043-290-2169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041-640-7332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063-239-3299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교육청)	061-260-0539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054-805-3369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055-268-119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4-710-0343

제4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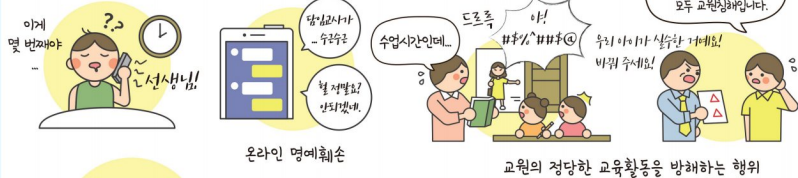
VII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교육활동침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교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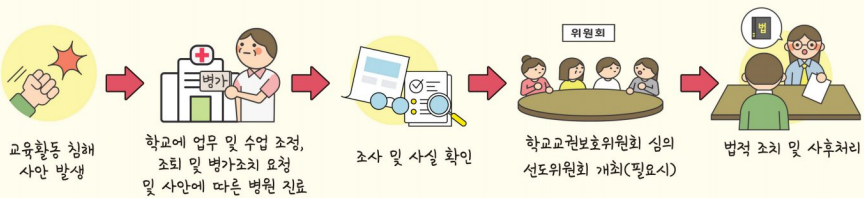
✓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와 구분되는 사안의 대응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사의 대응 절차



학생 조치

피해교원 지원(교원치유지원센터)



교육활동침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보호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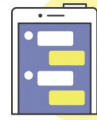
✓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교원에 대한
심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불법정보유통



담당교사가
- 수감수감
- 불성실로
안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법정보유통행위,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지」 제2조

공무집행방해

영혼이 어머님,
수업시간인데.



업무방해

우리 아이가 실한 거예요.
다들 생수들 돌려 주세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도 모두 안돼요.

상해: 3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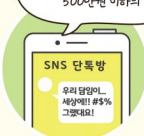
교사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

폭행: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직접적인 폭행
(폭행시도도 포함)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욕설 등 모든 공격적 행위

학교 방문 절차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상담해요!
감정을 가라앉혀요.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요!



사전에 방문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보호자와 교원의
목적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
방문증을 패용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을 나눕니다.

교육활동침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중·고등학생 용)



✓ 교육공동체의 소중함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권리'예요!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도와주는
소중한 분이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 대표적인 교육활동 침해 사례

원래 A가 공부 못했는데...
우리 수학생이 A의 친척이라...
수학 문제 알려줘서 1등했네!



손괴

게시 문서를 학교장에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경우
불만의 표현으로 학교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경우



모욕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교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성범죄

학생이 교사의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폰으로 전송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선도위원회를 거쳐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

교육활동침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초등학교 고학년 용)



✓ 교육공동체의 소중함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권리'예요!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도와주는
소중한 분이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 대표적인 교육활동 침해 사례

우리 담임선생님 변태야...!
OO이의 몸을 만졌대!



소름나버지!



헐 진짜야!!



명예훼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손괴

수업 시간에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등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성범죄

학생이 교사의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 내용 등을
교사에게 전송하는 경우



우리 담임선생님
진짜 멍청해, 재수없어!



모욕

수업 중 학생이 특정 교사에게
모욕을 하는 경우, SNS나
단톡방에서 교사를 모욕하는 경우



강요 보내ବା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선도위원회를 거쳐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

교육활동방해, 나와 선생님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초등학교 저학년 용)



✓ 나와 선생님의 관계의 소중함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소중한 '권리'예요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도와주는
소중한 분이예요!



여러분들처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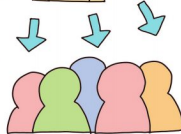
✓ 대표적인 교육활동 침해 사례

선생님 진짜
나뻐! 차별해!



헐 진짜?!

소문내이지!



선생님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여러 친구들에게 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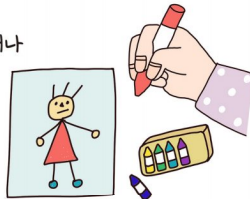
농능능



선생님 완전
똥똥해요! 돼지!

선생님의 생김새나 옷차림을 놀리는 경우

학교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학교에 걸어 놓은 그림에
낙서를 하는 경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땡땡땡

VIII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

(보호자용)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행위**

밤 늦은 시간
단순 민원



선생님 ~
선생님
저희 반 녹색 어머니
준서가 어떻게 되죠?

선생님, 교함이 어디세요?
○○○입니다.
거기 좀던데 같이 여행가요!

학교 방
상담 요구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연락



OO학부모님께
이런종 토요일에
학교 밖 카페에서
만남 상담합니다!

OO학부모
Q3

토요일에 약속 있는데...

✓ **중요한 이야기는 선생님과 학교에서 상담해주세요!**

학교 방문 절차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에서 방문증을 받은 뒤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방문증을 패용하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담은
근무시간내에!

✓ **근무 시간 외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해주세요!**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가정통신문

학교 대표 전화 사용 안내장

근무 시간 외 화재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학생용)



✔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행위



✔ 선생님과 상담은 이렇게!



✔ 상담 요청 방법

미리 선생님께
상담 내용을 밝히고
상담 시간을 정해요!



정해진 상담 시간에
선생님과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 록



부록 차례

I.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77
1. 관련 법규	7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7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83
교육공무원법	89
형법	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95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96
II. 관리자 및 동료 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 대응 방안	97
III.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안)	103
IV. 각종 서식	111
- 교육활동 침해 사건 경위서	111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대장	112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서	113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서	114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서	115
- 통고서(학교장용)	116
- ○○○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공문(예시)	117
-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118

I.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14.]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08.3.14.]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약)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약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전문개정 2008.3.14.]

제12조(교섭·협약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약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 등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본조신설 2016.2.3.]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2.3.]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부칙 〈제13936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특별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6항 및 제49조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준용)”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418호, 2016.8.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2.]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제6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5.]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8.2.]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2.5.]

제6조의2(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2.>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시·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7.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8.2.>

[본조신설 2013.2.5.]

[중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13.2.5.>]

제6조의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4.16.]

[제6조의2에서 이동 <2013.2.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4.29.]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4.29.]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8.2.]

제11조(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보호자: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8.2.]

부칙 〈제27418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약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5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12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마련)**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연가사용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조치 유형: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보고받은 관할청에게 그 침해가 위법하고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 고발의무 부과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청이 침해 현황과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II. 관리자 및 동료 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 대응 방안

-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에 대해서는 고충심사청구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구분 \ 종류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인권위원회 진정
누가		공립교원 (사립은 해당 없음)	공·사립교원	공·사립교원
청구내용		불이익 처분이 아닌 고충의 해결	불이익처분	성희롱, 성차별, 인권침해
결정의 효력		행정적인 명령	공립은 기속력 있으나 사립은 없음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불복할 경우	청구 인정	불복 못함 (피청구인)	공립은 불복 못함. 사립은 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가능	-
	청구 기각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청구인)	공립은 행정소송. 사립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과 법인 상대 민사소송	
특징		매우 다양한 고충에 대해서 신청 가능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기한		없음	30일 이내	없음
단계		고충심사위 (시·도교육청) ⇒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부)	공립(교육청징계위), 사립(징계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인권위원회
근거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고충심사위원회

- 설치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 고충처리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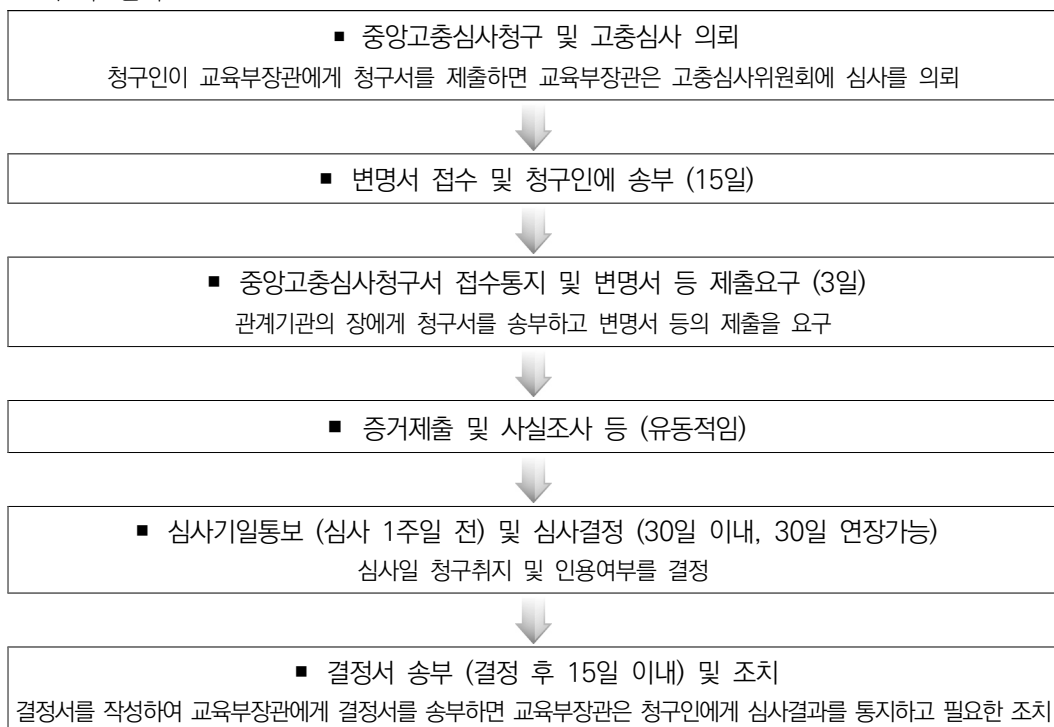
: 근무조건(봉급, 수당, 근무시간, 휴식, 휴가, 근무환경, 후생복지 등)

인사관리(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부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 주요 내용

- 교육공무원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음
-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해당 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청구인이 될 수 없음

- 심사 절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설치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및 제2조(소청심사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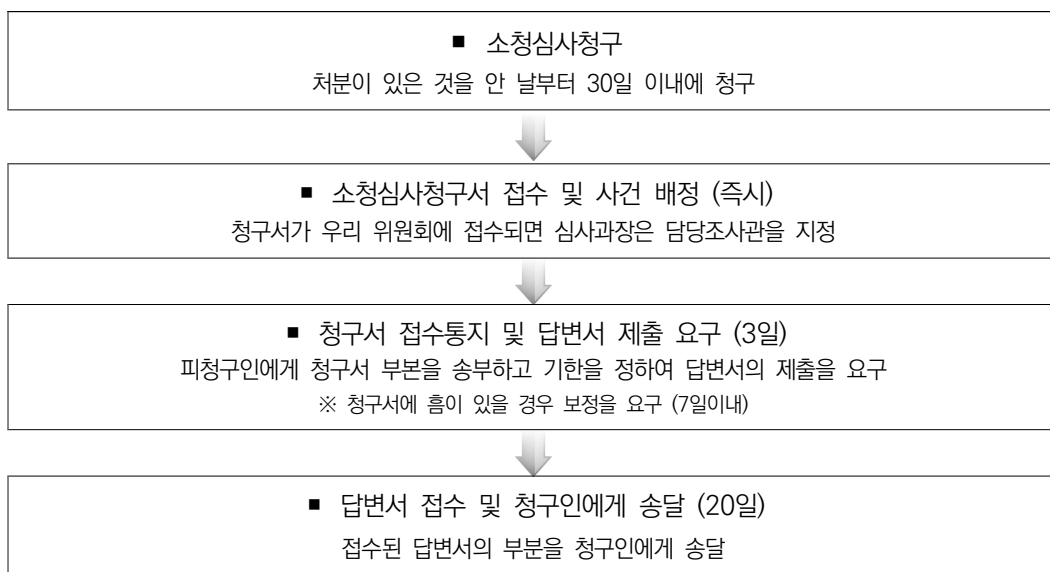
- 소청심사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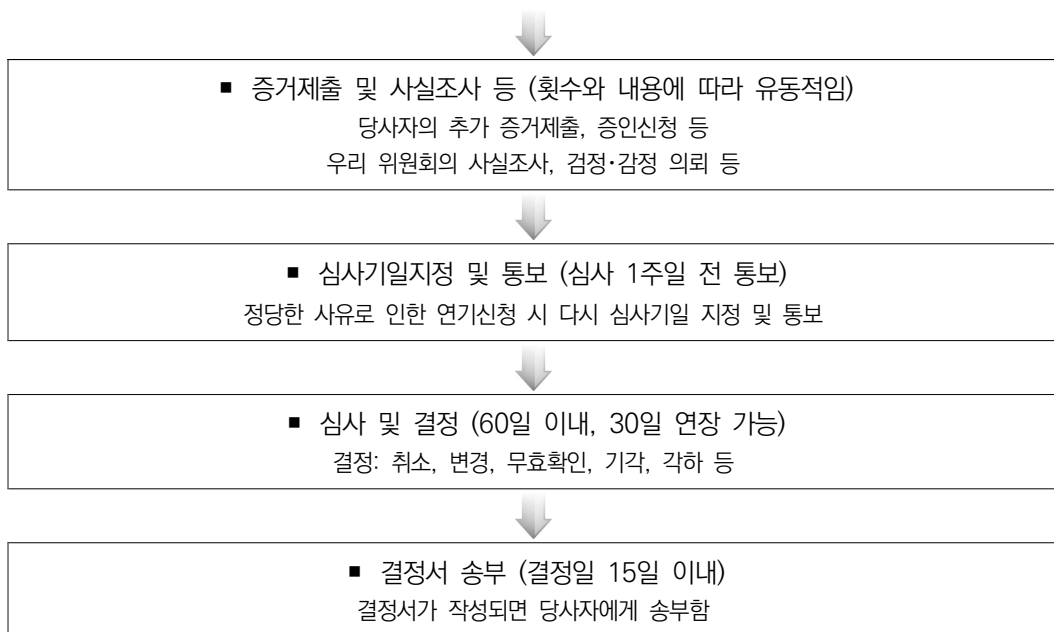
: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및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로 규정

- 주요 내용

-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공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음
- 국·공·사립의 교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제 교원이나 학교의 일반 행정 직원은 교원소청심사의 청구인에 해당되지 않는 대신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함

- 심사 절차





■ 인권위원회

- 설치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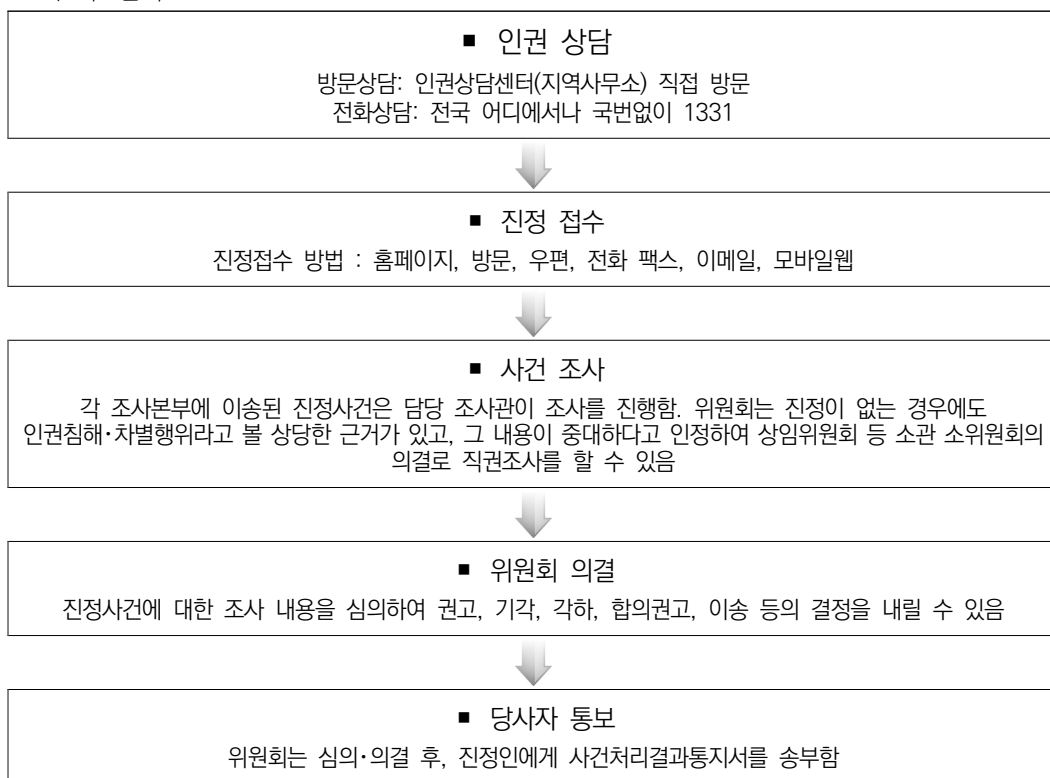
- 인권위원회의 진정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주요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라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당한 경우

- 심사 절차



〈참고〉 직장 괴롭힘 및 갑질 개념

직장 괴롭힘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위법,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

※ 교육부 ‘교육분야 갑질 근절 대책’(‘18.10.) : 직장 괴롭힘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추진

- 교육부 및 기관별로 갑질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실제 발생한 교육분야 갑질에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응 추진
 -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기존 ‘갑질 신고 및 상담창구’를 ‘교육분야 신고·제보 센터’로 확대 개편 운영, 정보 수집, 직원조사 실시를 위한 전담 직원 지정 운영, 익명으로 제보·상담
- 신고·제보된 직장괴롭힘 및 갑질 피해 사안은 검토하여 자체 정밀조사 및 조치
 - 조직적인 은폐·축소 우려나 자체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기관 주관 특별조사 실시
- 갑질 행위 처벌
 - 위법 사항은 적극 수사 의뢰 및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관장(관리감독기관) 형사 고발
 - 그 밖의 갑질행위 및 갑질 은폐나 피해자 보호 소홀 등의 경우 징계 조치
 - 하급자 갑질 중징계 요구자 직위 해제, 하급기관 갑질 징계요구자 해당 직무 배제 및 갑질 행위 징계처분자 승진심사 시 심사강화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

Ⅲ.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안) ((예시) ○○○교육청)

1 교원치유지원센터 구축

가. 위치

- 제1센터: ○○시 ○○동 (○○원 4층)
- 제2센터: ○○시 ○○동 (○○원 3층)

나. 인력구성 및 역할

☆☆센터 (거점센터)	◇◇센터
센터장(1), 전문상담인력(1), 전문상담교사(1), 변호사(1), 주무관(1)	전문상담인력(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상담, 지원 ■ 교육활동 보호 자료 개발 및 지원 ■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 교육활동 보호 D/B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상담, 지원 ■ 교육활동 보호 자료 개발 ■ 교육활동 보호 네트워크 구축 ■ 교육활동 보호 D/B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 센터 상담 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상담 종류	일반상담	■ ☆☆센터: 월화 12:00 ~ 21:00 수목금 09:00 ~ 18:00	상담료 무료
	전문의상담	■ 월, 목요일 17:00 ~ 20:00 ■ 현직 전문의 2명(☆☆센터)	
	변호사상담	■ 평일 09:00 ~ 18:00(☆☆센터)	
	외부기관 상담	■ 상담자와 시간, 장소 등 협의 ■ 최대 10회 상담	맞춤형 지원 상담료 무료
상담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 팩스: ○○○-○○○○ ■ E-mail : abcdefg@korea.kr ■ 홈페이지: www.adcdfg.com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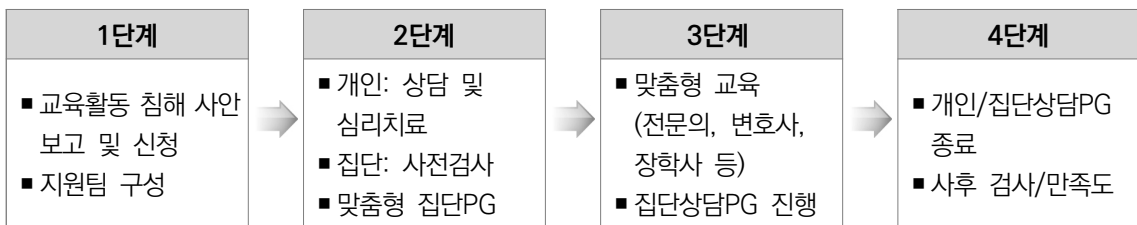
상담·치료 지원

가. 일반 심리상담·치료

- 1) 목적: 교직과 관련한 직무스트레스 완화
- 2) 이용 가능 시간
 - ☆☆센터: 월화 12:00 ~ 21:00, 수목금 09:00 ~ 18:00
 - ◇◇센터: 평일 09:00 ~ 18:00
- 3) 이용 방법
 - 희망 교원 전화 상담 또는 예약 후 대면 상담
 - 초기 면담 후 정신과 전문의 치료 또는 외부상담기관 연계
- 4) 상담자: 전문상담박사(2명), 정신과 전문의(2명), 외부상담기관(교육청 공모로 선정)

나. 찾아가는 상담

-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신속한 학교 생활 복귀
- 2)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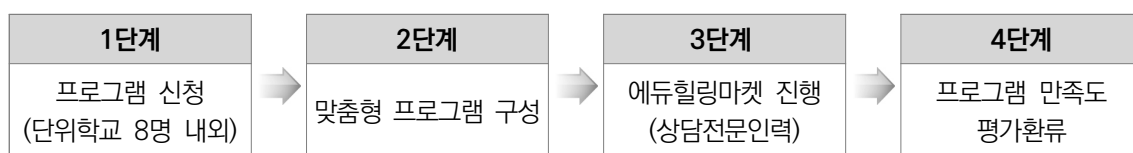
- 3) 신청 방법: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후 센터와 협의

다. 심리치료비 지원

- 1) 대상: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사안 보고 접수)
- 2) 시기: 교육활동 침해 발생 후 1년 이내
- 3) 신청: 학교에서 시교육청으로 신청(붙임 서식 활용)
- 4) 방법: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병원 내원 후 상담 및 진료 →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제출 → 10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라. 에듀힐링마켓(집단상담)

-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와 성장
- 2) 진행 절차



- 3) 신청 방법: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교에서 공문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 신청 후 센터와 협의
- 4) 에듀힐링마켓 프로그램(예시)

■ 전문인력과 재료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

연번	프로그램명	연번	프로그램명
1	의사소통 프로그램	6	미술치료
2	분노조절프로그램	7	원예치료
3	성격검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8	인형치료
4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 다루기	9	영화치료
5	학부모와 소통하는 프로그램	10	명상프로그램

마. 온라인 심리검사(자가진단)

- 1) 목적: 교원의 심리건강 자가 점검을 통해 자기관리 능력 향상
- 2) 이용방법: ○○교육청 홈페이지→ 사용자별정보→ 교직원
→ 교원힐링센터 → 자가진단 → 검사 실시(로그인없이 가능)
- 3) 심리검사 종류: 불안, 우울, 직무스트레스, 소진, 자살생각, PTSD
- 4) 결과 활용
 - 개인 확인 후 검사 결과 자동 삭제
 - 결과 확인 후 필요 시 교원힐링센터 상담 요청

바. 법률상담

-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상담 지원으로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문제해결력 강화
- 2) 상담내용
 -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와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3) 이용방법: 희망 교원 전화 상담 또는 예약 후 대면 상담
- 4) 상담자: ○○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 김○○(☎000-0000)
- 5) 법률특강: 희망학교 신청(학년 초 공문 시행)

3 행정적 지원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자 간 분쟁조정 및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나. 교육활동 One-Stop지원단

- 1) 목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지원 체계 구축

연번	교육청	학교급	장학사	연락처	변호사	전문상담박사 전문상담교사
1	A	유·초	김○○	○○○-○○○○	김○○ (○○○-○○○○)	김○○ (○○○-○○○○)
2		중	정○○	○○○-○○○○		
3	B	유·초	김○○	○○○-○○○○		
4		중	오○○	○○○-○○○○		
5	C	유·초	손○○	○○○-○○○○		
6		중	박○○	○○○-○○○○		
7	D	유·초	전○○	○○○-○○○○		
8		중	박○○	○○○-○○○○		
9	E	유·초	진○○	○○○-○○○○		
10		중	진○○	○○○-○○○○		
11	F	유·초	박○○	○○○-○○○○		
12		고	장○○	○○○-○○○○		

다. 특별휴가 및 공무상병가(휴직) 활용

- 1)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사용 가능
- 2) 6일 이내의 공무상병가는 학교장 승인으로 사용 가능
- 3) 교원이 공무상휴직 판정을 위한 서류 제출 시 행정적 지원

라. 학급교체 또는 긴급전보

-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피해 교원이 학급교체 희망 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 2) 피해 교원의 긴급전보(근거:○○교육청 중등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의2) 지원

4

교원배상책임보험

가. 목적: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 여건 조성

나. 보험기간: 2018. 9. 1.~ 2019. 8. 31.(2016.9.이후 유지 중)

다. 가입대상: 국·공·사립학교 교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휴직자 제외, 기간제 교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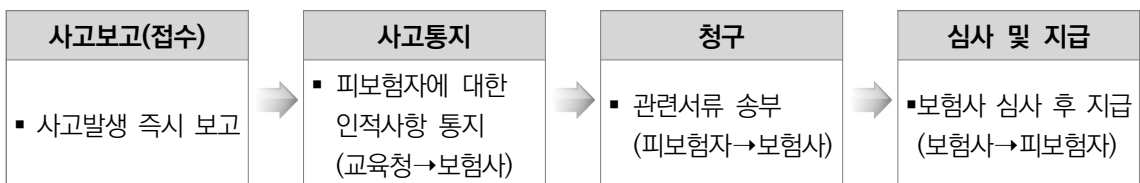
라. 보상범위

- 사고 당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최고 2억
- 연간 총 10억

마. 보장내용

-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 지원

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5

교원힐링연수 운영

가. 목적: 교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자긍심 고취

1) 교원힐링한마당

가) 시기: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나) 참여대상: 희망하는 유·초·중등교원 150명 내외

다) 주요 프로그램: 힐링콘서트, 체험프로그램(원예, 압화, 아로마 등)

2) 체험중심 힐링연수

가) 시기: 4월~12월 금,토(1박2일 숙박형)

나) 운영 횟수: 총 15회 이상

다) 참여 대상: 희망하는 유·초·중등교원 매회 20~35명 내외

라) 연수 내용: 매년 선정된 업체에 따라 변동 가능

연번	연수 내용	장소
1	문화예술체험	○○학생예술문화회관
2	한방힐링체험	산청
3	명상을 통한 행복한 교사되기	○○호텔
4	행복콘서트	○○대학교
5	교사 공감 힐링캠프	○○호텔
6	숲체험 힐링	○○산자연휴양림
7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힐링연수	○○산생태탐방원

마) 운영 방법

- 안정적인 연수 기회 제공을 위해 연수 상설화
- 연수 운영 기관은 교육청 공모를 통해 선정
- 교사와 관리자를 분리하여 연수 실시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우선 선발

IV. 각종서식

[서식 1]-필수

교육활동 침해 사건 경위서

해당교사 성명		소속	○○○학교
연락처(휴대폰)		연락처(직장)	
사건 일시	년 월 일 시	사건 장소	
사건 경위 (개조식 작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50px; margin-top: 10px;"></div>		
청구 금액	금 원 (₩ 원)		
해당학생 (학부모) 성명		연락처	
해당학생의 학부모 성명		연락처	

[서식 2]-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대장

순	피해교원 인적사항			가해자 인적사항			내용	요구서 접수일	사실 조사 기간	위원회 개최일	의 결 내 용	조 치 결 과	결 과 통보일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교원 과의 관계							
							◦ ◦						
							◦ ◦						
							◦ ◦						

※ 내용 란에는 사안 발생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구분 란에는 학생, 학부모 등 기입

※ 결과통보일은 피해교원 및 가해자에게 통보한 날짜

[서식 3]-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주소				
연락처	근무처		E-mail	
	자택		휴대전화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4]-필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서

1	학교명			학교장		(성명)		(H.P.)	
				학교교권보호책임관		(성명)		(H.P.)	
2	교육활동 침해유형 ¹⁸⁾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체크 (○)								
	교육활동 침해유형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체크 (○)								
3	관련자	교육활동 침해 학생 / 학부모 : 학반, 성명, 성별, 연락처 등							
		피해교원 : 성명, 성별, 연락처 등							
4	사안내용	일시	발생일시						
			신고(접수)일시						
		장소							
		배경원인							
5	현재상태	피해교원	신체 적						
			심리 적						
		가해학생 (학부모)	신체 적						
			심리 적						
6	피해교원·침해 학생조치내용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일시		심의내용				
		선도위원회	개최 일시		처분내용				
7	사후계획	피해교원							
		침해학생							
8	참고사항								
9	작성자	○○○ (인)							
10	보고자	○○○학교장 ○○○ (인)							

※ 사안 보고 : 사안 발생 직후 - 유선보고, 사안 처리 후 지체없이 공문보고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고·특수학교 → 시교육청

18)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개념 및 부록의 법령 참조

[서식 5]-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서

본 위원회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일시 :

2. 장소 :

3. 참석자

- 피해교원 :

- 가해자 : (학생/학부모)

- 위원 : ○명 중 ○명 참석

4. 조치결과

가. 피해교원 :

나. 가해자 :

20 년 월 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인)

○○가정법원(지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학교장 성명			
	학 교 명			
	전화번호(직장)	() -	휴대전화	() -
	담당교사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 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주 소			
	전화번호	()	-	
소년의 보호자	성 명		소년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V 표시)

<input type="checkbox"/>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input type="checkbox"/>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은 2018. 05. 03. 11:00에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0에 있는 ○○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걷던 중, 친구 김삼룡이 시험지를 늦게 제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김삼룡의 얼굴을 2대 때림. 이로 인해 김삼룡은 코뼈가 부러져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관련 자료 사본: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자료 포함), 위원회 속기록·의결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결과보고서, 담임교사·책임교사의 의견서 등
- 보호 대상 소년의 학생생활기록부

통 고 인 20 . . .
 ○ ○ ○ (인 19)

•• 115

[서식 6]-선택

○○○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공문(예시)

수신 ○○○교육감(교원인사과장)

(경유)

제목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1. 관련

가. 『교육기본법』제2장 제12조

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의 2

다. ○○고 - 호(2017. 00. 00.)

2. 위 법조항과 관련 공문에 의거하여 교사 최○○와 관련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붙임과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1부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의사 진단서 1부

4. 학교장 의견서 1부

5. 사실 조사서 1부

6. 해당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7.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학교장

협조자

() 접수 ()

우

전화 /전송

/비공개(6)

[서식 7]-선택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피해교원 인적사항			가해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교원과의 관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분쟁조정 요청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 ○ ○ ○ ○ ○ ○ </div>				
증빙자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의사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사실 조사서, 해당학생 학교 생활기록부, () 등				
<p>위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소속 직위 성명 (인)</p> <p>○○○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p>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발진

구분	기관	성명	직급
집필	한국교육법제연구센터	송요원	소장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
	인천광역시교육정책연구소	김효영	연구사
	인천하늘고등학교	조기성	교사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순희	장학사
	장유중학교	김영애	교사
검토	광주서광중학교	박은아	교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문식	장학사
	대구광역시교육청	조수영	장학사
	남양주공업고등학교	남원준	교사
	평내고등학교	신미화	교사
협력	교육부	안종호	사무관
		김은경	주무관
	한국교육개발원	김소아	연구위원
		윤태영	연구원
		이수형	연구원

연구자료 CRM 2018-221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중심으로 -

발 행 2018년 12월
 발 행 인 원장 반상진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27873)
 전화: (043) 5309-114
 FAX: (043) 5309-819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 쇄 처 (주)경성문화사
 전 화 044-864-5577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